

**CEO 동정**

### 전 철도청장 등 철도 원로들과 만찬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0일 이상권 전 이사장과 최기덕, 신영국, 최평욱, 최훈, 김인호, 손학래, 신광순 전 철도청장 등 철도 원로들과 만찬을 갖고,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추진 등 철도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대회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8일 대한교통학회 주관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갖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이용수요에 적합한 철도건설, 운영체제 효율화, 투자비 회수를 통한 국민부담 해소" 등을 강조하였다.

### 경의선 복선전철 등 수도권내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8일 경의선 충산보도육교, 강매역 및 서강역 현장 등 수도권내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계획과 설계, 시공 등 전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하였다.

### 공단,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공개경쟁 입찰

공단은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의 열차제어시스템 구매를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열차제어시스템은 고속열차가 300km/h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형열차의 위치나 선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행속도를 차상으로 전송하고 열차가 허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열차를 감속시키는 핵심 설비로서, 사업비는 2,387억원이다.

공단은 물품규격서 사전공개, 제안요청서 기술심사,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 및 가격협상, 낙찰자 선정 등을 거쳐 금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14년말까지 시설물검증 및 종합시험 등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은 작년 8월 국산화 참여제안 심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 전환기 구매계약 시 허위서류 제출, 불량 제품 납품 및 하자보수 이행 미흡 등으로 공단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경찰에서 조차 중이고, 부당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공단 관계자는 "열차제어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과잉기능 및 불필요한 기능 축소를 검토한 결과, KTX 선형열차가 후행열차를 위해 대피할 필요가 없는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의 부분선, 역간 도중 간담선 및 공주역 장비유치선(일부) 폐지 등으로, 사업비 161억원과 적정열차 운행시각 적용 등으로 신호설비의 공사비 12억원 등 모두 173억원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호남고속철도차량 공급자 선정

- 22편성(220량), 현대로템과 7,360억원에 계약체결 -

기술본부 차량처(차장 김우식)는 2.17일 호남고속철도차량 공급자로 현대로템(주)을 선정하고, 고속차량 22편성(220량)을 7,360억원에 '14년 말까지 15편성, '15년 6월까지 7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도입하는 고속철도차량은 그 동안 KTX-산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KTX-산천보다 좌석수를 약 12% 늘려 수송효율성을 개선하여 승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10량 또는 20량으로 운행할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차량은 구입비용 전체를 공단이 해외 차입으로 조달하여 구매를 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차량의 경우 50%를 국고로 확보하였고, 향후 차량을 철도운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하여 공단 재무건전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술본부 이은미 기자)

### '11년도 국유철도 전철화율 67% 달성

- 전년 대비 5.9% 증가...2020년까지 전철화율 85% 목표 -

공단은 2011년도에 전라선 익산~여수(180.4km), 부산신항배후철도(21.3km), 신분당선 강남~정자(17.3km), 분당선 오리~기흥간(5.1km) 등 4개 복선전철사업을 완공하여 전철화율을 전년 대비 5.9% 증가한 67%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00% 전철화된 고속철도 368.4km를 포함하여 철도연장 총 3,637.2km중 67%인 2,436.0km가 전철화 되어, 일본 69%('10년

UIC 자료 기준), 독일 59%, 프랑스 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공단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부고시 제2011-120호, 2011.4.4)에 따라 'KR 2020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전철화율 85%를 달성하여 저탄소 녹색철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박순달 기자)

#### ■연차별 전철화율 목표(KR 2020 글로벌 경영전략)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철도연장(km)	3,637.2	3,655.1	3,673.3	3,903.0	4,057.1	4,934.1
전철연장(km)	2,436.0	2,499.4	2,517.6	2,745.3	2,913.7	4,194.0
전철화율(%)	66.97	68.38	68.54	70.34	71.82	85.00

#### ■주요 국가별 전철화율(UIC 기준)

국가 (국가코드)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철도거리	전철화거리	전철화율	철도거리	전철화거리	전철화율	
중국(CN)	65,491	30,243	46.18%	66,239	32,717	49.39%	
일본(JP)	20,035	12,230	61.04%	14,815	10,225	69.02%	
프랑스(FR)	29,903	15,463	51.71%	29,841	15,635	52.39%	
독일(DE)	33,714	19,701	58.44%	33,707	19,819	58.80%	
스페인(ES)	15,044	8,772	58.31%	15,543	9,267	59.62%	

※ 국제철도연맹(UIC) 국제철도 통계(International Railway Statistics by UIC)

### '호남 고속철 신규사업자 면허' 현행법 가능

- 철도공사 독점 운영을 위한 의원 입법안은 위헌 소지 -

공단은 "현행 철도 관련법만으로도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운영에 제2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정부의 면허를 받은 자이면 철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는 누구나 철도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면허'는 정부가 특권을 설정해 주는 재량행위이므로, 철도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련 기준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그간 지자체의 도시철도공사와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및 경전철 회사, 저비용 항공사 등도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서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KTX 민영화라 우기고 집단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KTX 운영은 철도공사만이 독점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수권이 불가하거나 포기한 사업'만 신규사업자가 운영하고, 면허 결정 시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국민편익 증진에는 안중에도 없고 방만한 경영의 철도공사 독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하는 것이다.

홍성욱 공단 법무처장은 "운송사업 등의 면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회 심의를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철도공사 이외의 신규사업자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철도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말 기준 약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경부고속철 재원은 정부 재정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 12조원의 부채로 조달하였으며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부채를 상환해야 하나 현재 독점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지불하는 선로사용료는 연간 1,000억원 정도에 그쳐 부채 이자도 감지 못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독점 운영하려면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를 구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위탁에 따라 공단이 3,680억원을 부담하여 구매하는 차량을 리스하여 그 사용료를 투자비 회수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 등) ① ~ ③ (생략)	제5조(면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면허의 기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철도공사가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한 사업일 것

